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인도

Republic of India

2021년7월15일 | 선임조사역(G2) 안영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287천 km ² 	인구 13.9억 명 (2021 ^f)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GDP 3조 497억 달러 (2021 ^f) 	1인당 GDP 2,191달러 (2021 ^f) 	통화단위 Rupee 	환율(U\$기준) 74.10 (2020년 평균) 

-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연방공화국인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91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자유화 및 경제 개혁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1991년 이후 평균 약 7%의 고도성장을 지속한 결과, 2017년에는 명목 GDP 규모가 프랑스를 추월하여 세계 6위의 경제대국 진입에 성공하였음.
- 2019년 5월 총선에서 압승한 모디 정권은 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2024년까지 재집권하게 되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편임.
- 세계 2위의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영어 구사력(공용어) 및 과학기술 지식을 갖춘 고급 인력 등은 성장잠재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세력 견제를 피하고 있는 미국과 전략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주요 거점 국가로 부상하였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12. 10. 수교 (북한 동일자 수교)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74), 문화협정(1974), 과학기술협력협정(1976), 이중과세방지조약(1986), 항공협정(1992), 관광협정(1993), 투자보장협정(1996), 형사사법공조조약(2005), 범죄인인도조약(2005), 사증면제협정(2005),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2011), 사회보장협정(2011),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2014),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17)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 출	15,606,221	15,096,302	11,937,316	철강판, 반도체, 자동차부품
수 입	5,884,707	5,565,259	4,900,716	석유제품, 알루미늄, 정밀화학원료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3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315건, 7,145,991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f
경제성장률	6.8	6.5	4.0	-8.0	12.5
소비자물가상승률	3.6	3.4	4.8	6.2	4.9
재정수지/GDP	-6.4	-6.3	-7.4	-12.3	-10.0

자료: IMF WEO

코로나19 조기 극복 노력이 경기 회복의 관건

- 인도는 2014년부터 집권 중인 현 모디 정부의 시장친화적 경제개혁 정책에 힘입어 7~8%대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며 2017년 세계 6위의 경제대국 진입에 성공하였으나, 주요국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수출 부진, 금융권 부실여신 증가에 따른 유동성 감소, 민간소비 둔화 및 세수 감소 등으로 2019년에는 리먼 사태의 영향을 받은 2008년(4.1%) 이후 최저 수준인 4.0% 성장에 그쳤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봉쇄조치(2020.3.25~5.31.)의 여파로 산업생산, 수출, 소비 등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됨에 따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24.4%(전년동기 대비)로 급락하였으며, 연간 경제성장률은 역대 주요국(단, 필리핀 제외) 중 가장 낮은 -8.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에는 백신 보급에 따른 민간 소비심리 회복, 주요국 경기 회복에 힘입은 수출 증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글로벌 대체 생산기지로서의 가치 재부각에 힘입은 외국인투자 유입 및 기저효과 등으로 플러스 경제성장이 예상되나, 변이 바이러스 차단, 백신 보급 가속화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 여부가 경기 회복의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인도는 2021.1.16.일부터 의료 부문 종사자, 군·경, 공무원 및 고령층·만성질환자 등 3억 명에 대해 우선 접종을 추진하였으나, 4월 힌두교 축제 관련 대규모 인파 운집, 정부의 소극적 방역 대응 등으로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3월 말 7만 명 규모에서 5월 초 40만 명 수준으로 급증하였음. 이로 인해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지역별 봉쇄조치가 재시행되었으며, 2020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회복 움직임*이 둔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년동기 대비, 인도 통계기획부) : -7.4%(2020.3분기) → 0.5%(2020.4분기) → 1.6%(2021.1분기)

- EIU는 노동법·농업법 개정,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 노력은 인도의 중장기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나, 팬데믹 이후 은행권 부실자산 증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움직임 등으로 인해 2022~25년 중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평균 5.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	IMF ('21.4월)	ADB ('21.4월)	세계은행 ('21.6월)	EIU ('21.6월)	IHS Markit ('21.6월)	Moody's ('21.5월)
2021년	12.5	11.0	8.3	10.4	7.7	9.3
2022년	6.9	7.0	7.5	7.0	6.6	7.9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국내경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치 내로 수렴할 전망

- 인도는 소비자물가지수 바스켓의 약 45%가 식음료 품목으로 구성되어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수급 상황이 물가수준을 좌우하며,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으로 국제유가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 EIA에 따르면 인도는 아시아 3위(세계 23위)의 원유 생산국이나, 산업 발달과 함께 에너지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여 원유 수입액이 연간 상품수입액의 약 20%에 달하고 있음.
- 2015년 인도 중앙은행이 중기 물가안정 목표(4±2%)를 도입한 이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 내외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단, 2020년에는 경제활동 침체에 따른 원유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봉쇄조치에 따른 농산물 유통 차질, 인도 동부 지역의 홍수 피해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중앙은행 목표수준을 초과한 6.2%에 달하였음.
-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EIA, 2021년 브렌트유 전망 68.8달러/배럴),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 등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곡물, 채소류 등 농작물 작황 개선에 힘입어 2020년 말부터 식료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범위 내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 유지 후 점진적 경제 정상화 준비 예상

- 인도 중앙은행은 2019년 내수시장 성장동력 약화 우려에 대응하여 총 135bps 규모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으며, 2020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충격 해소를 위해 두 차례(3월·5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115bps 추가 인하하였음.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2000년(4.25%) 이후 가장 낮은 4.0%로, EIU는 경제활동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는 2022년부터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함.
- 인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외에 은행권 지급준비율 인하(4%→3%), 개인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소비자금융 상환기간 유예(2020년 3월부터 6개월, 2020년 9월에 2년 연장) 등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통해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을 뒷받침한 바 있음. 한편, 2021년 4월 중앙은행은 정부의 차입비용 절감, 시중 유동성 공급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확정된 물량만큼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G-SAP, 2021년 4~9월 중 2.2조 루피 매입 계획)을 시행하기로 공표하였음.
- 인도는 1994년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수출경쟁력 확보, 현지 자본시장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수시로 개입하여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단, 2020년 12월 미 재무부가 인도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2019.5월 지정해제)하면서 향후 인도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에 제약이 예상됨.
-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도국 시장에서의 대규모 자본 유출 여파로 미 달러화 대비 루피화 가치는 전년 대비 5.2% 하락한 74.1루피/달러를 기록하였음. 2021년에는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등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가 통화가치 절하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에 힘입어 연평균 환율은 전년과 유사한 74.7루피/달러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임.

국내경제

코로나19 대응 지출 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확대

- 인도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한 통합간접세*(GST, 2017년) 도입 등 조세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프라 확충, 농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출, 법인세율 인하(2019년, 30%→22%, 신규법인세 15%) 조치 등으로 인해 매년 GDP의 6~7%에 달하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음.

* 중앙정부 및 주 정부별로 난립한 간접세 항목을 단일세제로 통합한 단일상품서비스세(Good and Services Tax)로 석유제품과 주류 등을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되며, 품목별로 0%, 5%, 12%, 18%, 28%의 5단계로 차등 부과됨.

- 2020년에는 사회취약계층 앞 식료품 및 현금 지원, 중소기업 앞 유동성 공급, 근로자 급여 지원에서 공공 인프라 투자, 핵심산업 육성 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 대책 등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GDP의 약 9%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17.1조 루피)을 시행하였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도 12.3%로 대폭 확대 되었음.

인도 연방정부 예산안(억 루피, %)

구 분	2020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원안	수정안	
재정수입	224,589	160,165	197,642
조세수입	163,591	134,450	154,540
재정지출	304,223	345,031	348,324
자본지출	41,209	43,916	55,424
재정수지	-79,633	-184,866	-150,681
(GDP 대비)	-3.5%	-9.5%	-6.8%

자료: 인도 재무부, "Union Budget 2021-22", February 2021

- 2021년에는 경기 회복 및 수입관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 국영기업(에어인디아, IDBI 은행 등) 민영화 추진에 따른 매각수입 확보 등이 기대되나, 인프라 및 보건 분야 투자 확대, 고용 창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2020회계연도* 예산안 대비 14.5% 증가할 예정임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정부 예상치(-6.8%)를 상회하는 -10.0%에 달할 전망이다.

* 인도의 회계연도는 당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임.

-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도로, 철도, 전력, 에너지 개발 등을 중심으로 자본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26.2%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속도로(총연장 8,500km), 지하철(총 8,806억 루피), 항만(7개, 200억 루피), 전력(5년간 3.6조 루피) 및 수소에너지정책 등을 중심으로 총 102조 루피 규모(7,400여 건)의 국가 인프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한편, 정부는 2,000억 루피를 투입하여 개발금융기관(DFI)을 설립 하고, 향후 3년 간 5조 루피 상당의 인프라 자금 조달을 추진할 예정임.
- 인도 정부는 2021년 중 보건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2.2조 루피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6년 간 건강·의료 부문에 6,418억 루피를 투입하여 건강의료센터(도심 11,024개, 농촌 17,788개) 및 긴급수술 센터(15개)를 건설하는 등의 신보건 정책을 공표하였음. 아울러 'Clean India 2.0' 정책을 통해 폐기오염물 처리, 주요 도시 대기질 정화 등 환경정화 사업(향후 5년 간 1.4조 루피 투입)을 추진할 계획임.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f
경 상 수 지	-38,168	-65,599	-29,763	33,007	-28,975
경상수지/GDP	-1.4	-2.4	-1.0	1.2	-1.0
상 품 수 지	-148,134	-186,692	-157,678	-95,245	-158,188
상 품 수 출	304,107	332,087	331,272	281,701	349,403
상 품 수 입	452,241	518,779	488,950	376,946	507,591
외 환 보 유 액	385,104	369,798	426,880	542,157	600,517
총 외 채	511,484	543,112	558,548	608,186	657,395
총외채잔액/GDP	19.3	20.1	19.5	22.5	21.6
D.S.R.	9.1	9.5	9.9	11.5	10.6

자료: IMF, EIU, OECD

경상수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황형 흑자 기록 후 적자 전환 예상

- 인도는 의약품,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등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상품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자동차·전자기기 부품 및 의약품 원료 등 중간재와 원유 등 에너지 수입수요가 커서 매년 GDP의 5~6%에 달하는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대규모 관광수입(2019년 303억 달러, 세계관광협회) 및 IT·SW 서비스 수출(2019년 1,286억 달러, 인도 중앙은행), 세계 1위의 해외근로자 송금액(2020년 831억 달러, 세계은행) 등에 힘입은 서비스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흑자로 상품수지 적자 폭을 일부 만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0년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 여파로 상품 수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 수입액 감소, 중국과의 갈등 격화에 따른 대중 수입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하면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20년 5~6월 중국군과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 이후 반중 정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중국산 앱(틱톡, 위챗 등 118개) 사용 금지, 수입 규제(태양광 장비·에어컨 등 수입 규제, 제3국 우회수입 제재) 등 다양한 대 중국 무역 규제를 시행 중임. 2020년 중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액은 5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음.

구분 (억 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f
상 품 수 지	-1,481	-1,867	-1,577	-952	-1,582
서 비 스 수 지	759	808	842	870	856
본 원 소 득 수 지	-264	-298	-294	-319	-316
이 전 소 득 수 지	605	701	731	732	752
경 상 수 지	-382	-656	-298	330	-290

자료: IMF, EIU

대외거래

- 2021년에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회복,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상품 수출이 전년 대비 24% 증가할 전망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 수입액 증가,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상품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35%)하면서 상품수지 적자 폭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는 IT·SW 서비스 수출, 해외 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흑자 폭을 상회하면서 경상수지는 적자 반전할 전망이다.
- 단, 인도 정부의 수입산업 대체화 정책* 고려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당분간 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자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부품(10%→15%), 휴대폰 부품(0%→2.5~10%)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 하였음. 최근 WTO는 인도의 최혜국 앞 단순평균 관세율이 2015년 13.5%에서 2019년 17.6%로 상승했다고 언급함.

외채상환능력

외채구조와 외환보유액 모두 안정적인 편

- 인도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하여 정부 재원을 대부분 국내 채권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정부의 꾸준한 외채관리 노력에 힘입어 경제규모 대비 외채비중 및 외채구조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GDP 및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각각 20%, 100%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음.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제규모 및 총수출 규모 감소로 2020년에는 동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경기 회복 추이에 따라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 * 총외채잔액/총수출(%) : 100.7(2017) → 97.3(2018) → 98.1(2019) → 119.8(2020) → 111.2(2021^f)
- 외채의 약 80%가 중장기 채무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만기·금리 등 관리 노력에 힘입어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인도 중앙은행(2020년 말 기준)에 따르면 외채의 약 1/3(33.1%)이 루피화 표시 발행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외채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
- * 단, 총외채 중 정부·중앙은행 채무가 18.1%, 상업은행·민간회사 등 채무가 81.3%로 민간 부문 차입비중이 높고, 양허성 자금이 9.1%에 불과한 점 등은 유의할 필요
-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및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최근 수년간 4,000억 달러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2020년에는 6월 봉쇄령 완화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급증으로 중앙은행이 루피아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화 자산을 대량 매입하였으며, 외환보유액 규모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5,422억 달러(세계 5위)를 기록함. 2021년에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 한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약 20%(2020년 22.8%, 2021년 전망 20.5%),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약 10개월분(2020년 11.9개월분, 2021년 전망 10.4개월분)을 기록하는 등 외환보유액은 상대적인 기준으로도 양호한 편임.

구조적취약성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은행산업 자산건전성 추가 악화 우려

- 코로나 이전부터 불안정했던 인도 은행권의 자산건전성은 코로나 여파에 따른 실업률 상승 및 1인당 소득수준 저하, 기업 경영 둔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대출상환 유예, 취약기업 신용 제공 등으로 추가적인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Moody's에 따르면, 2009~12년 중 국영은행들이 인프라, 전력, 철강 등에 제공한 여신이 부실화되면서 은행권 무수익자산(Non-Performing Asset) 비율이 2011년 2.3%에서 2018년 11.2%까지 상승하였음(2019년 9.1%). 한편, 기업·개인 채무자 보호를 위해 인도 대법원이 2020년 9월부터 금융기관의 무수익자산의 신규 분류를 금지(2021년 3월 해제)하고, 채무불이행 자산 분류 기준을 종전 10만 루피에서 10백만 루피로 완화함에 따라 은행산업 자산건전성 관리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인도 중앙은행(2021년 1월)은 2021년 9월 기준 은행권 무수익자산 비율이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13.5%, 부정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14.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한편, 인도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2천억 루피를 투입하여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고, 국영은행 2개(Bank of Maharashtra 및 Central Bank 예상)를 민영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코로나 방역 및 경기 부양 등 정책 우선순위 감안시 단기間に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역내 경쟁국 대비 인프라 기반 부족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2019)에 따르면 인도의 종합 경쟁력은 141개국 중 68위로 조사되었으나,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인프라 분야의 경쟁력은 103위에 그침.
- 도로 인프라 품질(76위→48위)은 모디 정부 취임 이후 5년 간 개선되었으나, 전력 접근성(105위) 및 식수 위생 수준(106위)은 역내 주요 경쟁국인 베트남(84위, 95위), 인도네시아(95위, 98위), 필리핀(103위, 105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인도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 수립 시 인프라 투자 등 자본지출 편성액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하고, 전력, 도로, 용수공급 등을 중심으로 총 102조 루피 상당의 인프라 사업을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음.

자연재해에 취약한 경제구조

- 인도는 몬순 기후로 인해 강우량이 연중 특정 시기(6~9월)에 집중되고, 취수 가능한 수자원이 인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관개 및 수리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농업의 GDP 대비 비중이 15.4%(CIA), 농업 인구 규모가 총 근로자의 54.6%(인도 재무부)에 달하나, 관개시설을 갖춘 경작지는 절반(48.8%)에 불과하여 단위면적당 곡물 수확량이 낮고, 사이클론,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있음.
- 2019년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는 물 스트레스(Water Stress)가 극심한 17개국 중 하나로 인도(13위, 비중동 지역 국가 중 가장 취약)를 지적한 바 있음. 한편, 열대 기후에 속하는 인도는 열 스트레스(Heat Stress)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높은 국가로, 시카고 대학의 연구자료(2021)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 1°C 상승시 제조업 생산량이 2%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장잠재력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구조

-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인 인도는 총 인구 13.9억 명 중 67.0%가 생산가능 인구에 해당함. 특히, 2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43.8%, 14세 이하의 잠재적 노동 인구가 전체의 약 1/4(26.3%)에 달하여 '인구 보너스'에 따른 경제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도 보건가족복지부(2020.8월) 발표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인도의 인구증가율은 12.5%(2011~21년)에서 8.4%(2021~31년)로 감소할 전망이나, 절대인구 규모는 2031년 14.7억 명 수준까지 증가하여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할 전망이다.

인도의 연령별 인구분포

연령	0~14	15~24	25~54	55~64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비율(%)	26.3	17.5	41.6	7.9	6.7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 ADB에 따르면 인도는 영어 구사능력을 보유한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1990년대부터 IT·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글로벌 기업의 아웃소싱 거점지로 성장하였으며,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구조는 대규모 경제와 함께 대외충격 흡수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GDP 대비 산업비중(CIA)은 농업 15.4%, 제조업·광업 23.0%, 서비스업 61.5%으로 IT, 금융 및 관광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 비중이 큰 편임. 한편, Trademap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외에도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강, 귀금속, 의약품, 의류 제품 등 비교적 다양한 수출품목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됨.

풍부한 미개발 천연자원은 장기 성장잠재력의 원천으로 기능

- 인도에는 정부 규제, 인프라 및 자본·기술 부족으로 미개발된 천연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으며, IHS Markit은 인도가 광산업 개발 등을 기반으로 한 장기 성장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인도의 천연가스(43조 입방미터) 및 원유 매장량(47억 배럴)은 각각 세계 22위, 24위 수준임. 한편, 석탄 확인매장량은 1,013톤으로 세계 5위(전 세계 매장량의 9%)에 해당하며, 보크사이트(매장량 세계 5위), 철광석(매장량 세계 6위), 망간(매장량 세계 7위), 다이아몬드(아시아 유일), 금, 운모 등 금속·비금속 광물자원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음.

정책성과

제조업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 개혁정책 추진

- 모디 행정부는 2014년 출범 이래 인프라 확충 및 제조업 육성을 토대로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경제 개혁정책("모디노믹스")을 추진하여 왔음.
- 모디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Make in India'는 25개 핵심산업의 투자여건 및 제반 인프라를 개선하여 외국인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제조업 부문의 기술경쟁력과 고용 수준을 제고하는 것임. 동 정책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14년 14%에서 2022년까지 2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자동차 및 부품, 항공, 전자기기, 신재생에너지, 식품 가공, 섬유, 화학, 보건·복지 등 성장 가능성이 높고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큰 25개 산업 부문을 육성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한편, 인도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을 기회로 삼아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20년 5월 'Make in India'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Self-Reliant India' 정책을 발표하였음. 동 정책은 ①경제의 퀀텀 점프(Quantum Jump), ②인프라 고도화, ③첨단 시스템 확보, ④강력하고 활기찬 시민사회, ⑤글로벌 공급망에 기반한 수요 창출 등 5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함.
-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 Linked India, PLI)는 'Self-Reliant India' 정책 구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향후 5년 간 인도 내 생산제품 수출액의 4~6% 상당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외자 유치를 확대하는 것임. 2020년 4월 인도 정부는 전자산업에 5년 간 5천억 루피(67.5억 달러 상당)를 지원키로 하고 삼성 전자 등 16개사를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11월에는 통신·네트워크, 의약품, 자동차 및 부품, 태양광 모듈, 배터리셀 등 10개 산업에 5년간 1.5조 루피 지원을 확약하였음.
- 이러한 경제개혁 정책과 함께 창업, 건축 인·허가, 납세, 통관 등 사업절차 간소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세계은행이 평가한 인도의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순위는 2014년 142위(총 189개국)에서 2019년 63위(총 190개국)로, 모디 총리 취임 이후 5년 만에 79계단이나 도약하였음.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한 투자 유치 확대

- 인도 정부는 2019년 석탄 채굴·판매(100%), 위탁생산(100%), 디지털 미디어(26%)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2020년 항공산업(여객·화물수송) 앞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철폐, 방위산업 자동승인 지분을 상향조정(49%→74%), 2021년 보험업 외국인 지분을 상향조정(49%→74%) 등 외국인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인도의 FDI 유입액은 최근 수년 간 증가하고 있으며, UNCTAD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심리가 냉각된 2020년에도 ICT 부문 M&A 등에 힘입어 FDI 유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연도별 FDI 유입액(억 달러, UNCTAD) : 399(2017) → 422(2018) → 506(2019) → 641(2020)

정치안정

높은 지지율 및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로 개혁정책 추진 가능

- 모디 총리는 2014년 총선에서 소속 정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연방 하원 의석의 과반(282석/545석)을 차지 하면서 집권하였으며, 2019년에도 연합정당(국민민주연합, NDA)이 총선에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하였음. EIU는 모디 총리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도, 연합정당의 안정적인 의석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현 여당이 차기 총선(2024년 5월 예정)까지 정국 주도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의원내각제를 표방하는 인도는 연방 하원에서 과반석을 점유한 세력이 집권당이 되어 총리를 추대하고 있음. 2019년 총선에서는 연합정당 기준으로 연방 하원 의석의 65%(355석/545석), 연방 상원 의석의 42%(102석/245석)를 확보하였음.
- 글로벌 데이터 정보업체인 Morning Consult의 조사결과(2021.6월)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에 따른 국민적 실망감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미국, 일본, 한국 등 13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지지율(66%)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주요국 수반에 대한 지지율 비교(지지율 순) : 인도(66%), 이탈리아(65%), 멕시코(63%), 호주(54%), 독일(53%), 미국(53%), 캐나다(48%), 영국(44%), 한국(37%), 스페인(36%), 브라질(35%), 프랑스(35%), 일본(29%)
- 인도에는 2,000개가 넘는 정당이 난립하고 있으나 여당에 대응할 강력한 대응세력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모디 정권은 코로나 기간 중에도 농업법, 노동법 등 핵심 개혁안을 의회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시켰음.
- 2020년 9월 인도 정부는 민간자본 및 기술 유치 등 농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총 3개의 농업법 개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음. 그동안 농민 보호 및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기구(농산물시장위원회)가 담당해 온 농산물 수매 및 유통 업무를 민간 부문에 개방하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임.
- 2019~20년 중 개정된 노동법은 29개의 중앙 노동법을 임금법, 사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법 등 4개로 통합·단순화하는 것임. 단, 동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 및 계약직의 근무여건 개선과 같은 취약계층 보호조치를 포함한 반면, 해고·감축규정을 완화(정부 승인 대상기업 : 근로자 100인 이상 → 300인 이상) 하고, 파업 사전 신고기한(42일 → 60일)을 확대하여 노동계의 반발을 야기하였음.

민주주의 수준은 역내 개도국 대비 성숙한 편

- 인도는 1951~52년에 첫 총선이 실시된 이후 대규모 쿠데타 없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왔으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등 정치·행정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 하였음. EIU에서 평가한 인도의 민주주의 지수(2020년)는 167개 평가대상국 중 53위로,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39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평가점수(6.61점/10점 만점) 상으로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분류되었으나, 선거절차(8.67점), 정부 기능(7.14점)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음.

사회안정

농업법 개정안 반대 등 시위 증가 전망

- 인도 농민들은 농산물시장위원회 관리 하의 시장(mandis)을 통해 생산물을 판매해 왔으며, 쌀, 밀 등 23개 곡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농민법 개혁안에 따라 향후 농민들은 민간 도매시장에 직접 생산물을 판매하게 되나, 인도 의회가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수십만 명의 농민이 수도 뉴델리로 연결되는 10여 개의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개혁안 반대 시위를 지속하고 있음.
- 개혁법안에 최저가격 보장제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대기업과의 가격 협상에서 영세 소농(전체 농민의 약 2/3가 1헥타르에 못 미치는 농지 보유)이 절대적으로 불리함에 따라 농민들은 생계 위협을 우려하여 법안 폐기를 요구 중임. 시위가 격화되면서 2021년 1월 인도 대법원이 개혁법안 시행 중단 판결을 내리고, 정부도 법안 시행을 2022년 7월까지 18개월 연기하였으나, 농민 단체가 정부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시위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 EIU와 IHS Markit은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 및 실업 증가 등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이 형성된 가운데, 기 개정된 노동법에 더하여 토지수용법 개혁안*, 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가 신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인프라 사업 추진 등에 따른 토지 수용시 거주민 동의율(현 80% 이상 필요) 완화, 보상금 삭감 등

계층 및 종교 갈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 상존

-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1947년 공식적으로 철폐되었으나 생활 저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직 취업·대입 정원 할당제 등 정부의 하층 카스트 우대정책을 역차별로 인식하는 상층 카스트에 의한 갈등 요소가 잠재하는 가운데,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모디 정부 출범 이후 하층 카스트에 대한 강력 범위가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인도 하리아나 주에서 '공직·대입 등 하층 카스트 우선할당제' 수혜 범위에 중간층 카스트 포함을 요구하는 폭력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2018년에는 '특정 카스트(Scheduled Castes) 보호법' 완화에 반발하는 최하층 카스트의 전국적 시위가 발생하였음. 2019년 모디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대입 정원 할당제 범위를 중·상층 카스트까지 확대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됨.
- 2019년 12월 인도 의회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인접 3국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로 이주한 이민자에게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단, 모디 정부가 힌두교, 시크교, 불교, 기독교, 자이나교 등 종교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이슬람교를 의도적으로 배제함에 따라, 무슬림(인도 인구의 약 14% 차지)과 극우 힌두교도 간에 수 차례의 유혈 충돌이 발생하였음. EIU는 최근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감소한 지지 세력을 재확보하기 위해 인도국민당이 힌두 민족주의 경향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였음.

사회안정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위협은 제한적

- 2019년 5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IS)은 인도 내(카슈미르 지역)에 'Wilayah of Hind'라고 명명한 자치 행정구역(province)을 수립했다고 선포하였으며, 2020년 8~9월 뉴델리, 2021년 7월 인도 북부 지역에서 테러 모의 중에 인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바 있음.
- 단, 인도 정부는 2008년 파키스탄 무장단체에 의한 뭄바이 호텔 테러(175명 사망) 이후 대테러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IHS Markit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 위협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함.

환경·사회 위험 등으로 인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

- Moody's¹⁾는 ESG 요소가 인도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여력 및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낮아 ESG 위험 대응능력이 취약하다고 판단, 인도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년 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은 없으며 42개국이 2·3등급,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열 스트레스, 물 스트레스,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수질 및 대기질 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등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낮은 소득수준 및 소득격차, 고등교육 기회 불평등 등은 사회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교육, 주거, 보건 등 정부의 기본 서비스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약 15%가 영양 실조에 노출되어 있으며, 영아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편임. 이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 기대수명, 교육수준, 1인당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는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순위는 2020년 기준 131위(189개국 대상)로 동일신용등급 국가군(BBB, Fitch) 평균(61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지배구조)** 정부의 정책 효율성이 높지 않아 환경·사회 위험 대응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도의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함.

1) Moody's Investors Service, "Credit Opinion: Government of India - Baa3 negative", May 2021

국제관계

국경 분쟁 격화에 따른 대 중국 견제 강화

- 인도와 중국은 약 3,500km에 달하는 구간의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을 사이에 두고 국경 분쟁을 지속하여 왔음. 2020년 5월 라다크 및 시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6월에는 1975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 추정)가 발생하는 유혈 사태가 빚어 지자, 인도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견제가 강화되었음.
- 인도 정부는 무력 충돌 사태 이전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대 인도 투자 제한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무력 충돌 이후에는 중국산 앱 사용 금지, 중국산 부품 등에 대한 우회수입 규제, 중국 기업의 인도 내 투자 및 프로젝트 입찰 제한** 등 대중 규제를 강화하였음. 2020년 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인도가 최종 불참한 것 또한 중국 주도의 무역협정에 참여할 명분과 실리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음.
- * 인도 접경국이 기업 인수 등 인도 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의 사전허가를 획득해야 함
- ** 인도 정부·국영기업 발주 프로젝트 입찰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바이든 정권 출범 후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2021년 2월 양국은 라다크 판공호 지역에서 철군하기로 합의하였음. 단, 2021년 5월부터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 군수물자를 확충하고 있으며, 인도도 라다크를 포함한 북동부 지역에 군용도로를 보강하기 위해 전투공병을 파견하는 등 양국의 교전 가능성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 등과는 우호적 관계 유지

- 인도 정부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과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20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여 32억 달러 상당의 방산물자 및 첨단기술 이전에 합의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이 방문하여 군사협력 강화를 제안하였음. 바이든 정부는 국가안보회의(NSC) 내에 인도-태평양 조정관직을 신설하고, 한국, 인도, 일본 등 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한 대 중국 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 EIU는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세력 견제를 목적으로 미국이 인도와 관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무역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2018년 미국 정부는 인도를 포함한 주요 수입상대국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관세를 각각 25%p, 15%p 추가 인상하였으며, 2019년에는 인도에 대한 개도국 앞 관세특혜(GSP)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이에 대응하여 2019년 인도 정부가 농산물을 중심으로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최대 120%까지 인상하면서 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되었음.
- 일본은 델리-뭄바이 고속철도 및 산업회랑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에는 인도 정부와 5G 기술 및 사이버 보안 등 정보 인프라 부문에 대한 협력 협정을 체결 하였음.

국제관계

- 2020년 7월 일본 정부는 역내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인도 및 호주 정부에 '공급망 이니셔티브'(Trilateral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구성을 제안한 바 있음. 2020년 11월에는 인도양 동북부 벵골만 등지에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합동 해상훈련이 진행되었음. 단, EIU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외교정책 대응여력 부족 등으로 당분간 인도 정부의 쿼드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파키스탄과 긴장관계 지속, 남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백신 외교에 제약 발생

-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오랜 갈등을 겪어 왔음. 2019년 2월 동 지역에서의 자살 폭탄 테러로 인도 경찰요원 44명이 사망하자,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군기를 투입하여 파키스탄 내 테러 근거지를 공습하였으며, 파키스탄도 대응사격을 하는 등 48년 만의 공중전이 벌어지면서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었음.
- 카슈미르 지역은 현재 파키스탄(서쪽)과 인도(동쪽)의 분할통치를 받고 있음. 인도(힌두교국) 소속 자치구인 잠무-카슈미르 지역은 주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인도로부터의 분리독립 운동을 지속하여 왔음.
- 2019년 8월 인도 정부가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폐지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였음. 인도 정부는 2020년 중 5,100여 건(19년래 최대)의 접경지역 충돌이 일어났다고 밝혔음.
- 2021년 2월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정전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IHS Markit에 따르면 정전 합의 이후 접경지역 충돌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단, 역사적·종교적 갈등에서 비롯된 오랜 긴장 관계가 금번 합의로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아스트라제네카, 코백신 등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인도는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세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2021년 1월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등 주변국에 대한 백신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6,600만 회분 상당의 백신을 지원하였음. 단,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인해 2021년 4월 인도 정부가 백신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백신 외교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외채상환태도

대외 채무재조정 경험 없으며, ECA 앞 연체비율은 미미한 수준

- 인도는 파리클럽을 통한 대외 채무재조정 경험이 없음. 한편, 2021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인도에 대한 여신잔액은 215.6억 달러(단기 51.8억 달러, 중장기 163.8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1.4억 달러로 연체비율(0.7%)이 미미한 수준임.
- * 캐나다(46.1억 달러), 한국(42.4억 달러), 프랑스(39.3억 달러), 독일(28.1억 달러), 일본(21.9억 달러) 등 24개 ECA 잔액 보유
- 미 수은, 영국 UKEF 및 독일 Hermes는 인도에 대해 공공·민간 부문 모두 만기 제한 없이 인수 가능하다는 입장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21.06)	3등급 (2020.06)
Moody's	Baa3 (2020.06)	Baa2 (2017.11)
Fitch	BBB- (2006.08)	BB+ (2004.01)

투자적격등급은 유지 중이나, 코로나19 이후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고조

- OECD는 인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사는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수준(BBB-)을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20년 6월 경기 침체에 따른 정부의 경제 개혁 지연 우려, 재정건전성 악화 및 은행권 부실 증가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평가등급을 종전 Baa2(부정적)에서 Baa3(부정적)로 한 단계 하향조정 하였음. 한편, 2021년 5월 보고서에서는 높은 성장잠재력 및 다변화된 경제구조, 현지 자본시장 발달 수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인해 GDP 대비 공적채무 비율이 2019년 72%에서 2020년 89%로 급증한 점 등 취약한 정부재정을 한계로 지적함.
- Fitch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성장 모멘텀 둔화, 공적채무 증가 경향 등을 들어 2020년 6월에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조정하였음.

- 인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봉쇄조치의 여파로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됨에 따라 사상 최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2021년에는 백신 보급에 따른 민간 소비심리 회복, 주요 수출상대국의 경기 회복, 외국인투자 유입 및 기저효과 등으로 9~10%대 경제성장 달성이 예상되나, 코로나 극복 속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인도는 외채구조와 외환보유액 모두 안정적인 편이며,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광물자원 등을 기반으로 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단, 국영은행 등 은행 산업의 자산건전성 악화, 코로나 대응 지출에 따른 정부 재정적자 확대 및 공적채무 증가 경향 등은 주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성장 저해요소로 지적받고 있음.
- 모디 총리의 연임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2024년 임기 종료시까지 제조업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경제개혁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단,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농민법, 노동법 등 중대한 개혁안을 연이어 의결함에 따라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 향후 정부의 백신 보급 가속화 등 코로나 극복 노력, 정부재정 및 은행산업 건전성 강화, 인프라 확충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기 부양 등이 인도의 장기 성장 및 대외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